

제4장 남북대화의 추진

제1절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개최

1. 개최 배경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당국간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해 왔다. 북한측도 1999년 2월 3일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통해 ‘남북고위급정치회담’을 제의하는 등 당국간 회담 개최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협상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왔다.

정부는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측의 진의를 탐색하기 위해 1999년 4월 북한측에 당국간 비공개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으며, 북한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남북당국간 차관급 비공개접촉이 4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쌍방은 이 비공개접촉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 제1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가. 제1일 회의

남북 쌍방이 6월 3일 비공개접촉에서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을 6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우리측은 6월 17일 관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차관급당국회담에 나가는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면서 회담을 6월 21일 오전 10시 북경 시내 「캠핀스키 호텔」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북한측의 수정제의가 없었으므로, 우리측은 6월 20일 대표단을 북경에 파견하였다. 우리측 대표단은 북경에 도착한 후 북경주재 통일연구관과 북경주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간 전화연락을 통해 도착상황을 알리고 6월 21일 회담시 북한측 대표단에 대한 안내절차 등에 대해 통보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6월 21일 오전 전화연락을 통해 당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한 회담을 오후 3시로 연기할 것을 우리측에 요청하면서, 북한측 대표단의 명단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우리측은 남북차관급당국회담에 임하고 있는 북한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북한측의 회담 시간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일 오후 북한측은 다시 우리측에 전화를 걸어, 우리측이 6월 20일까지 북한측에 전달하기로 한 10만톤의 비료중 2만 2천톤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 잔여분이 도착될 때까지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을 연기한다고 알려왔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6월 20일까지 비료 10만톤을 전달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취했으며 폭우로 인해 비료 도착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이미 대북전화통지문을 통해 밝힌 바 있음을 지적하고, 6월 21일 저녁 9시에 2만 2천톤을 실은 배가 북방한계선을 통과하여 6월 22일

아침 북한측 지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측은 북한측이 비료 도착 지연을 빌미로 회담을 연기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제1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을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이 회담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은 1999년 6월 22일 오전 10시 중국 북경 「캠핀스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개최된 제1일 회의는 쌍방 기조발언, 의견 개진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양영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통일부 서영교 국장과 조명균 심의관이 대표로 참가하였고, 북한측은 박영수 내각직속 책임참사를 단장으로 하여 최성익 내각직속 과장과 권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가 대표로 참가하였다.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가시적인 조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호 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와 관련하여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차원에서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우선 가동시키고, 이와 함께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을 남북간의 당면문제를 협의하여 그 해결방도를 마련하는 대화기구로 유지하면서 점차 장관급 또는 총리급 회담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이 앞으로는 판문점 등 한반도내의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쌍방이 당초 합의한 의제와는 배치되게 기조발언문 전체를 서해교전사태(6.15)에 집중하면서 이산가족문제 토의를 완전히 외면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측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것은 명백히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 문제는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통해 협의·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해상에서 발생한 남북간의 무력충돌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차원에서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우선 가동시키자고 촉구하였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에 따라 회담이 진전되지 못하자 우리측은 당일(6. 22) 오후에 쌍방 수석대표접촉을 갖거나 6월 23일 오전에 제2일 회의를 가질 것을 제의하였으며, 북한측은 우리측이 먼저 서해교전사태에 대해 연구한 후 다시 만나자면서 제1일 회의를 종료하였다.

나. 제2일 회의

제2일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제1일 회의에 이어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관련, 더욱 세부적인 내용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토의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당일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를 개최하여 하루속히 이산가족문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자고 촉구하는 한편, 서해교전사태의 발생 경위와 북한측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였다.

북한측은 이 문제 해결이 회담 진전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서해사건 당시 우리측 고위당국자나 정치인들이 참가 장병들을 격려한 것을 문제삼는 등 이 사건만을 집중 거론하면서 우리측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회담 진전에 난관을 조성하였다.

결국 쌍방은 비공개접촉을 통해 합의한 의제 토의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제2일 회의를 마쳤으며, 제2차 회담을 7월 1일 오후 3시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개최기로 하였다.

3. 제2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가. 전체회의

제2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은 1999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례의 전체회의와 2차례의 수석대표접촉으로 진행되었다.

7월 1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우리측은 서해사건에 대해서는 제1차 회담에서 쌍방이 충분히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6.3 비공개접촉의 합의사항에 따라 이산가족문제 협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면서, 제1차 회담시 우리측이 내놓았던 이산가족문제 해결방안을 다시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상호관심사로 되는 당면문제들로 제1차 회담에서 제시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문제 등에 대한 북한측의 의견을 요구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을 갔던 민영미씨가 북한측에 억류되었던 사건을 계기로 남북왕래 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신변안전보장특별위원회」 구성문제를 긴급 협의 의제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신변안전보장특별위원회」 구성문제를 협의하자는 우리측의 제의에 대해 금강산 관광객 문제는 북한측 아·태평화위원회와 남측의 현대그룹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해 협의할 문제로서 당국간 회담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우리측에 대해 잔여비료 제공 보장을 요구하면서 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이른바 ‘전향적인 안’이라며 ① 우리측이 ‘서해해상에서의 무장도발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담보 ② 잔여비료 수송계획을 북측에 알리며, 그 첫배를 띄우는 것과 동시에 기본문제 토의에 착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이 주장하는 비료전달 문제와 관련, 6.3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우리의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비료가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북한측도 6.3 합의사항에 충실하게 이산가족 문제 토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북한측에 제공키로 했던 20만톤중 7월말까지 전달 예정인 10만톤의 수송계획이 준비되어 있으나, 이것이 약속한 기일내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쌍방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북한측은 전체회의를 종결하고 그 자리에서 수석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함으로써, 쌍방은 곧바로 수석대표접촉에 들어갔다.

나. 제1차 수석대표접촉

대표단 전체회의에 이어 곧바로 진행된 제1차 수석대표접촉에서 북한측은 돌연 ‘새로 발생한 중대사건’에 대하여 그들의 입장을 전달한다면서 「월간조선」 1999년 7월호에 게재된

‘황장엽의 전화인터뷰 내용’과 관련한 성명을 낭독하였다. 북한측은 이 성명을 통해, 황장엽씨가 「월간조선」을 통해 북한체제(김정일)를 모독한 것은 우리 정부가 개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측의 ‘책임적인 대답’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이 ‘우리 체제는 정부가 언론사에 대해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누차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차기회담의 날짜도 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퇴장해 버림으로써 수석대표 접촉은 14분만에 끝나고 말았으며 다음 회담이나 접촉 일자도 합의되지 못했다.

다. 제2차 수석대표접촉

우리측은 7월 1일 저녁 북한측에 전화를 걸어 회담 속개 여부를 7월 2일 정오 이내로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만약 북한측으로부터 긍정적인 회답이 없는 한 우리측 대표단은 서울로 철수할 것이며, 만일 북한측이 회담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측은 일단 서울에 가서 연락을 기다릴 것임을 통보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측 대표단 철수 통보에 대하여 북한측은 7월 2일 오전중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측은 당일 오후 2시 20분 북한측에 서울로 철수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북한측에 대표단 철수를 공식 통보한 우리측은 수석대표 내외신 기자회견을 실시하여 「남북차관급당국회담 우리측 대표단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7월 2일 저녁, 북한측은 우리측에 7월 3일 오전 중에 수석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에 동의함에 따라 제2차 수석대표접촉이 7월 3일 개최되었다. 제2차 접촉에서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6.3 비공개접촉시 합의내용과 북한측이 이산가족 문제를 ‘통크게,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지적하면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측의 구체적 방안 제시를 거듭 요구하였다. 또한 잔여 비료지원과 관련하여, 북한측이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 올 경우 비료수송계획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6.3 비공개접촉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측이 비료수송 계획을 알리고 첫배를 띄우면 이산가족문제 토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서해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측의 사죄 및 재발 방지를 또 다시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차기회담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판문점을 통해 연락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측 단장은 우리측 제안을 접수조차 못하겠다고며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쌍방은 차기회담 개최일자에 합의하지 못한 채 제2차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을 종료하였다.

제2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진행

1. 제4차 4자회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4차 4자회담은 1999년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본회담에 앞서 1월 18일 진행된 차석대표급 준비회의에서 합의한 일정에 따라 제4차 4자회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즉, ① 첫째날은 전체회의 개최 ② 둘째날 및 셋째날은 오전에 긴장완화분과위와 오후에 평화체제분과위를 각각 번갈아 개최 ③ 마지막 날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분과위 논의결과를 청취하고 회담을 종결하였다.

제4차 4자회담에서 남·북·미·중 4자는 분과위 운영절차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냄으로써 제3차 회담시 2개 분과위 구성·운영에 합의한 데 이어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짓고 향후 회담에서는 본격적으로 실질문제에 대한 토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차기회담을 4월 중순 제네바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다.

다음은 각측 「제4차 4자회담 대표단」의 명단이다.

제4차회담에서 우리측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및 긴장완화를 논의하는 2개 분과위를 통해 실질문제 논의가 본격화 되어야 하며, 내실있는 분과위 운영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실질문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해 내자고 언급하였다. 특히, 실질문제 논의에 있어서 쉬운 것부터 실천해 나감으로써 서로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한반도 안전보장을 저해하는 근본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며, 한반도 긴장조성의 원인으로 되어 있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변경과 그 수단의 제거가 근본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즉,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근본문제들이 반드시 논의·해결되어야 하며, 민족 내부문제인 남북사이의 문제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논의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측은 실질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이 가장 실제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밝혔다.

중국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각측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과위 논의를 통해 공통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분과위 논의를 점진적으로 해나간다는 원칙과 상호간 압력행사 자제 및 ‘구동존이(求同存異)’ 원칙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긴장완화분과위 회의에서 우리측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중 시급하고 실천이 용이한 조치로 ①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운영 ② 주요 군사훈련의 통보 및 제한된 범위의 군사훈련 참관 허용 ③ 군인사 상호 교류 등을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포함한 긴장완화의 방법문제 등을 의제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측은 점진적 긴장완화를 통해 관계를 증진하고 더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각측은 어떠한 의제도 제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측은 유관 각측간 다차원·다형식적 신뢰구축조치 등을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화체제분과위 회의에서는 우리측은 우선 평화체제의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평화체제의 내용은 일반적인 평화협정의 내용 이외에 한반도 특수사정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평화체제의 형식은 당사자문제 등 입장 차이가 큰 어려운 문제이므로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북한측은 토의 의제로 미·북간 평화협정과 관련한 원칙적인 문제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측은 평화체제의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어 논의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찬성하며, 각측이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서 의제 선정기준은 4자의 컨센서스와 ‘쉬운 문제부터 논의·해결해 나가면서 점차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전진해 나간다는 선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측은 평화협정의 내용에 유관 각측간의 대결 종식 및 관계개선과 자주평화 실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 제5차 4자회담

제5차 4자회담은 1999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본회담에 앞서 4월 23일 진행된 차석대표급 준비회의에서 합의한 일정에 따라 본회담은 지난 제4차 회담과 비슷하게, ① 첫째날은 전체회의 개최 ② 둘째날 및 셋째날은 오전에 긴장완화분과위와 오후에 평화체제분과위를 각각 번갈아 개최 ③ 마지막날(4.27)은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분과위 논의결과를 청취하였다.

제5차 4자회담은 비록 아무런 가시적 성과가 없는 가운데 차기회담 일자만을 정한 채 종료되었지만 4자회담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자가 본질문제 협의에 착수함으로써 4자회담이 본격 궤도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음은 각측 「제5차 4자회담 대표단」 명단이다.

제5차회담에서 우리측은 전체회의보다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실질문제 논의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긴장완화분야에서 한두가지 시범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비록 작지만 가시적 진전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 분과위 의제가 먼저 확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우리측과 미·중측이 주장하는 실질문제 논의를 회피하였다. 이에 따라 긴장완화분과위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체제분과위에서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의제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미국측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우선 논의하자는 우리측 입장에 대체로 동조하는 가운데 4자회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한 지속성(momentum) 유지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측은 그동안 회담과정에서 수행한 4자회담의 조정자·중재자 역할을 계속 견지하면서도 분과위 의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일정하게 중국측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긴장완화분과위 회의에서 우리측은 4차회담시 제의한 3가지 군사분야 신뢰구축 조치를 기초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중국측도 구체적이고 협의가 쉬운 신뢰구축 조치를 우선 협의할 것을 주장하여 우리측과 입장을 함께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를 긴장완화분과위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종식되기 전에는 군사적 신뢰구축 분야를 논의할 수 없으며 “외국군대가 조국 강토를 강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운운은 민족적 자존심에 관련된 것” 이라면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평화체제분과위 회의에서 북한측은 평화협정의 형식이 더욱 중요하므로, 당사자문제가 해결되어야 평화협정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남과 북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북한측이 장황하게 설명한 유엔사의 불법성, 한국의 정전협정 당사자 자격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대응하였다.

미국측은 평화협정은 남북이 직접적 당사자가 되고 미·중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스위스 정부가 제안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신뢰구축 경험을 4차회담 참가국들이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스위스 정부가 회담 기간중 수차례 제안한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북한측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었다.

미국측은 직접적 입장 표명은 하지 않으면서 의장국으로서 스위스측이 OSCE 경험을 동북아 지역에 적용하는 문제의 구체방안에 대해 좀더 문의해 보겠다고 언급하였다. 중국측은 ‘각측의 일치된 주장을 존중하겠다’ 며 분명한 입장 표명을 보류하였다.

3. 제6차 4차회담

제6차 4차회담은 1999년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회담일정은 지난 4·5차 회담일정과 유사하였다. 이 회담에서 4국은 한반도의 상황에 적합한 긴장완화조치들을 검토·논의하였으며, 향후 한반도에 수립될 평화체제의 윤곽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토론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이 주한미군 철수,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을 분과위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차기회담 일자도 정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다음은 각측 「제6차 4차회담 대표단」 명단이다.

제6차 4차회담에서 우리측은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분과위원회 협의를 위주로 실질문제 토의에 주력하였으며, 긴장완화 분야에서 가시적 진전 도출과 평화체제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

북한측은 4차회담을 미·북 양자구도화 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주한미군 철수,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의제화하자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차기회담 일자 합의를 거부하였다.

미국측은 대체로 우리측과 입장을 같이 하는 가운데 4차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해 가면서, 긴장완화 분야에서 본회담 사이의 활동(intersessional activity) 필요성을 강조하고 평화체제 및 긴장완화의 실질적 문제 협의 진전을 강조하였다.

중국측은 서해교전사태 등 최근 한반도 긴장정세를 예시하면서 조속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평화체제의 개괄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동 문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긴장완화분과위 회의에서 우리측은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등 제5차 4자회담시 이미 제의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협의·이행을 촉구하고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로의 접근방식을 강조하였다. 또한 긴장완화의 실질적 협의 진전을 위한 방안으로 판문점 장성급회담 활성화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을 추가로 제의하였다.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남북화해를 위한 가장 초보적 조치이며 미국의 대북 신뢰조성 의지의 척도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의제화 할 것을 주장하였다.

미국측은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등 우리측과 유사한 내용을 제의하였다. 한편 미국측은 북한측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이 문제는 한·미간의 문제이며 여타측과 협상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측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행동규범을 만들자고 제의하였다.

평화체제분과위 회의에서 우리측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실질적 여건과 기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평화체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기본입장을 제시하였다. 즉, 평화체제의 형식으로 남북이 주당사자로 되고 미·중은 증인자격으로 서명하는 「남북평화합의서」와 미·중이 합의서의 효력을 보장하는 내용의 「추가외정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평화체제의 내용에는 전쟁상태의 종식 선언 및 무력불사용 등 일반적 내용과 일정수준의 신뢰구축과 군축 조치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측은 미·북이 정전협정의 기본 당사자였던 만큼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에서도 미·북이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가운데 각측이 제시한 의제를 종합하여 목록을 만들고 이를 하나 하나 검토하자고 제의하였다.

미국측은 우리측이 내놓은 평화체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제의에 동조하면서 평화체제와 관련한 합의는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국측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측 입장을 「조선반도 평화협정 초안」 형태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이 협정의 내용으로 전쟁상태의 종식 선언, 불가침·내정 불간섭,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조치 등 일반적인 평화협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제3절 임진강 유역 남북공동 수해방지를 위한 당국간 회담 제의

1. 제의 배경

1999년 7월말부터 8월초에 걸쳐 쏟아진 집중 폭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남북한에는 막대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임진강 유역은 최근 수년간에 걸쳐 홍수 피해를 크게 입었다. 우리측 지역은 경기도 북부지역인 파주시, 연천군, 포천군 등에서 각 800mm 이상의 폭우와 강풍으로 인하여 이재민 25,000여명과 사망자 10여명이 발생하였고 농경지도 23,000ha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북측지역도 8월 2일과 5일 「중앙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개성시, 황해도 등지에 200~700mm의 비가 내려 수십만 정보의 농경지가 침수, 매몰되는 가 하면 수백km의 도로와 철도가 유실되고 수많은 주택이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가 났다고 알려졌다.

이처럼 임진강 유역에서 매년 수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임진강 수계를 제대로 치수하지 못한다 그 원인이 있으나, 임진강이 남북을 관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일방의 치수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따라 8월 11일 정부는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총재 명의의 서한을 북한측에 보내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의하였다.

2. 북측 반응

우리측 제의에 대해 북측은 8월 13일 「민족민주전선」 방송을 통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북측은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고려해 볼 때 비현실적인 것이고 최근 홍수 피해를 입은 임진강 유역의 주민들의 반정부 투쟁을 잠재워 보려는 교활한 술책의 일환’이며, ‘군사적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진강 유역에 공동 수해 대책을 세우고 한 대북제외는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8월 17일에는 「중앙방송」을 통해 ‘남조선이 임진강 치수대책을 위한 기획단 구성과 남북공동 대책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는 것은 피해지역 인민들의 반정부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한 요술에 불과하며, 임진강 유역의 수해는 기획단이 구성되지 않아 오는 것도 아니며, 북남공동대책을 세우지 않아 입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3. 향후 추진방향

남북한이 공유하는 하천을 함께 관리하고 이용하여 자연재해를 막는다면 매년 발생하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를 위한 남북간 협력을 계기로 남북간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

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한 남북간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남과 북이 함께 만나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한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북한측의 호응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